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문 용 린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 지 영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Ⅰ. 새로운 흐름 : 대학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 특히 1970,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대부분의 중장년층들에게 '국민윤리' 과목을 떠올리게 한다. 교양 필수였던 국민윤리 과목은 오늘날에는 세련된 이름을 가진 선택 과목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지만, 국민윤리 교과서 속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추억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윤리를 통한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대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으로 오해받다 보니, 여기에서 파생되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승화되어 민주적 삶의 방식으로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이익과 이념을 위한 투쟁이 마치 민주주의적인 것처럼 오해되면서, '9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고 집단 이익을 추구하려는 활동들만이 흘러넘치고 있다. 초 · 중 · 고등학교와 일반 사회교육에서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윤리로부터 연상되는 불쾌한 추억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진지하게 다시금 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의 확장과 그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대학 대중화 시대에 들어섰다. 2002년 현재 전국에는 400개 가까운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재적학생 수는 357만여 명에 이른다. 2004년이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학은 소수 엘리트의 산실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할 다수의 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문용린, 2001).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은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 즉 건강한 시민의 육성이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회의적이다. 대학교육은 확대되었지만, 한국의 대학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 심화 그리고 확대에 공헌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이 전통적인 상아탑주의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된 위상과 변화된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의 요구가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 등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삶을 유예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능동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삶에 참여(commitment)하고 있는 시기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은 민주시민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대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임과 동시에, 선거에 참여하고 아르바이트와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이중성은 그 동안 대학교육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잊혀지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매우 새삼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위의 특성 때문에, 대학 시절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걷기 훈련이 시작되는 것처럼, 막 시민 생활을 시작하는 대학 시기는 본격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초 · 중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앞으로 살아갈 시민 사회를 상상하며 시민성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만을 배우는 데 그치기 쉽다면,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과 활동과 반성이라는 교육의 단계를 충실히 밟아 나갈 수 있는 실천 기반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과 방법만 갖추어진다면, 대학의 민주시민교육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대학은 그 역할을 다해 왔는가? 이러한 질문은 비단 우리 대학에만 던져진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시민의 양성이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부상하면서, 대학교육 체제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학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적 책무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대학교육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igher Education, Civic Responsibility and Democracy, 이하 ICHE)에서 주관하는, 대학에서의 시민성과 시민적 책무성 교육 프로젝트(University as Sites of Citizenship and Civic Responsibility Project, 이하 '대학 민주시민교육 국제연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민주적인 가치와 실천을 지원하는 대학의 활동을 조사하고, 대학의 민주적인 지향과 민주주의 조성 능력을 평가하며, 대학과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학 자원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유럽 40개국과 남아프리카, 미국의 50개주가 참가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미국과 유럽, 남아프리카의 3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ICHE, Civic Responsibility and Democracy, 2000). 우리나라도 2002년에 필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제비교 기초연구(문용린, 2002)'를 수행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의 체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대학 민주시민교육 체제가 끼치는 영향력을 발견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미국과 유럽의 대학과 비교하여 점검해 보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학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대학 민주시민교육의 세 차원

대학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수행하는 세 가지 차원의 활동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들은, 첫째, 대학의 민주적 풍토를 형성하는 민주적 제도의 차원(democratic institution), 둘째,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성 교육의 차원(civic education), 셋째, 민주시민성을 발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차원(community involvement)이다. 각각의 차원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적 제도의 차원

대표적인 민주주의 연구가인 토크빌은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삶의 양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민주적인 삶의 양식은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에서 유래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습관이 그러하듯이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은 '민주적으로 생활해 보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민주적인 제도는 민주적인 생활 경험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는 제도라는 말로 옮겼지만, 'institution'이란 말은 기관이나 사회 속에서 확립되어 있는 관례, 관습, 법령 등을 포괄하고 있다. 즉 제도는 공적인 사건들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기관의 제도를 통해, 그 기관을 움직이는 가치와 규율의 가장 정제된 형태를 보게 된다. 대학의 민주적인 제도는, 대학 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학 경영진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제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와 학생들의 권리 보장이다. 이 두 요소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이다.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상호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2. 시민교육의 차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와 시민적 책무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시민교육은 전통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이나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예를 들어, 사회학과, 정치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교육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 지역사회 이해,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의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교과목들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과 민주적인 교육 방법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이다. 민주적 원리의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효과가 부각되면서, 보다 '민주적인' 방법을 활용한 시민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주로 토론이나 학습 공동체 운영 등 교실학습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기숙사 등 학내생활공간에서 실제 생활에 기초한 생활학습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활학습이란 생활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 민주시민교육을 해나가는 것으로서(Guarasci, 2001),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생들을 위한 생활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생활학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지역사회 참여의 차원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경험은 시민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를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해 준다. 지역사회 참여가 대학생들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Boss, 1994 ; Gorman et al., 1994), 지역사회 참여는 대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형태에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학습'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학습'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학습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점을 두는 요소에는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학습은 학습의 장을 지역 사회로 옮긴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봉사학습은 학습내용 자체가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활동과 함께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중의 하나이다. 대학시기는 선거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탄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선거의 의미와 올바른 선거참여 자세를 학습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Ⅲ. 국제적 비교 분석 : 한국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체제의 특징

대학의 민주시민교육은 앞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대학의 이러한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문헌 분석, 대학 관계자 면접, 교수 · 교직원 ·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몇 단계를 거쳐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밝혀진 한국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체제의 특징을, '대학 민주시민교육 국제연구'를 통해 밝혀진 미국과 유럽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체제의 특징[1]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igher Education, Civic Responsibility and Democracy(ICHE) Homepage의 Data와 Reports & Papers 참조(http://iche.sas.upenn.edu/reports/reports.htm).

"

대학 민주시민교육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세 가지 차원의 활동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들은, 첫째, 대학의 민주적 풍토를 형성하는 민주적 제도의 차원,
둘째,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성 교육의 차원,
셋째, 민주시민성을 발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차원이다.

"

1. 민주적 제도

(1)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

한국의 대학은 대부분 대학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면접 조사한 14개 대학 중에서 공식적인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1개교뿐이었다.

대학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공식적 참여 보장은 미국 및 유럽의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물론 각 학교마다 특색이 있으나,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설치하고, 또 실제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들 대학의 운영진들은 학생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의 대학들은 대학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적 규정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표 1. 참조).

한국 대학의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볼 때, 대학의 민주적 제도의 활성화 정도는 미국, 유럽, 한국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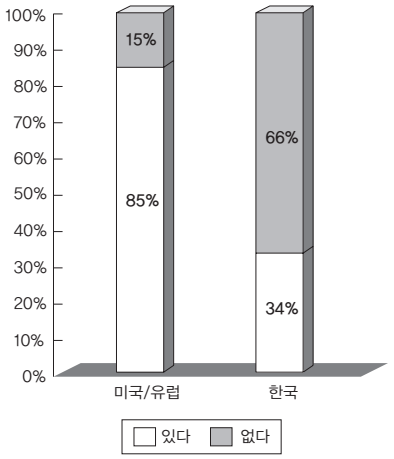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 대학들은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면에서,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서 미국 및 유럽 대학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경영 참여기회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미국/유럽의 조사 대상 교수/교직원들의 85%와 학생들의 68%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 대상 교수/교직원들의 34%와 학생들의 3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그림 1, 2 참조).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한국 대학의 민주적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 비해 매우 낙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는 대신, 비공식적 위원회, 간담회, 청문회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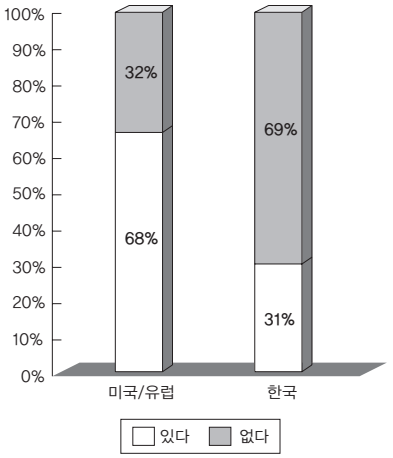
특히, 한국 대학의 민주적 제도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인터넷의 활용이다. 국내 모든 대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최고 운영진에게 학생들이 직접 개인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표 1〉 대학의 위원회에 대한 학생 참여 현황(한국, 유럽, 미국)

국가	공식적 참여 보장	실제 참여
한국	보장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음
유럽	보장함	참여하지 않음
미국	보장함	참여함



〔그림 1〕 학생들의 대학운영 참여기회(교수)



〔그림 2〕 학생들의 대학운영 참여기회(학생)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총장에게 건의함' 같은 코너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대학의 독특한 의사소통 형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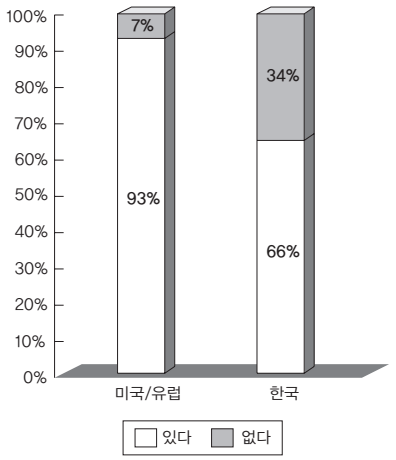
(2) 학생의 권리 보장

한국과 미국, 유럽 대학들 모두 학생들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만 전담하는 기관이나 학생의 권리에 관해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없으며, 학생들도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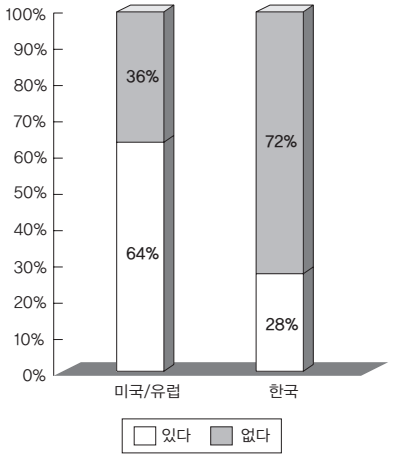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는 미국의 대학에서는 보편적이나 한국에서는 1개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학생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의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학이 한국의 대학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권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부서나 기구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조사 대상 교수/교직원의 93%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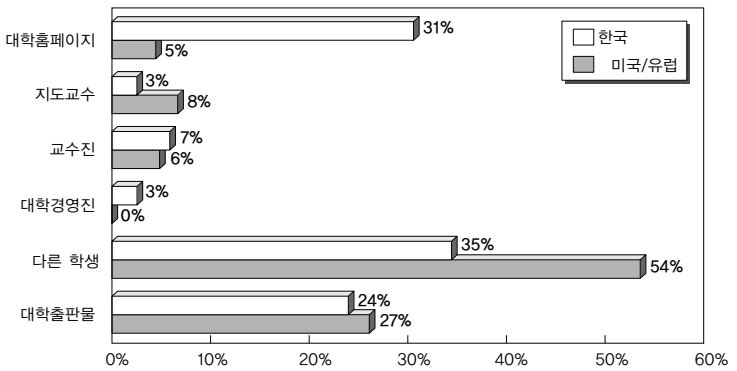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생들의 경우에 더 커서, '학생들이 학생 징계나 지도 기구에서 담당하는 일정한 역할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조사 대상 학생의 64%가 '긍정적으로



〔그림 3〕 학생 권리에 관한 도움을 주는 부서(교수)



〔그림 4〕 학생 지도 기구에서의 학생의 역할(학생)



〔그림 5〕 학생의 권리에 대해 배우는 경로(학생)

응답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그림 4 참조).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대학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 중에 독특한 것은 역시 인터넷의 활용이다. 학생들이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다른 학생들이고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진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는 모든 나라의 대학생들이 동일하지만, 한국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배우는 경우가 다른 학생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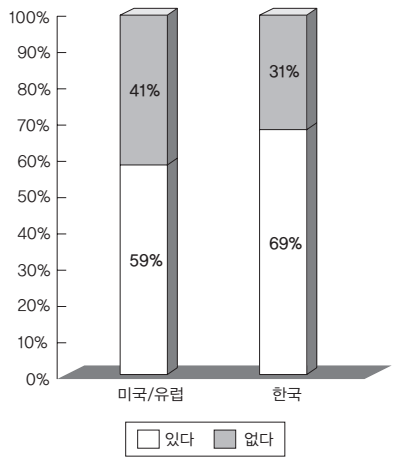
즉,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원은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54%), 대학출판물(27%), 지도교수(8%) 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35%), 대학홈페이지(31%), 대학출판물(24%) 순이다(그림 5 참조).

2. 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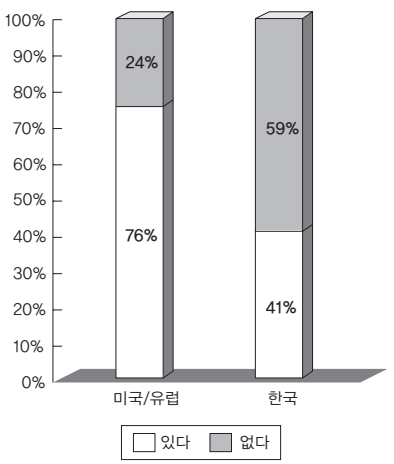
(1)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 유럽 · 한국 대학의 운영진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민의 책무성 증진', '민주주의 가치 함양'을 대학의 사명으로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의 교육목표에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위한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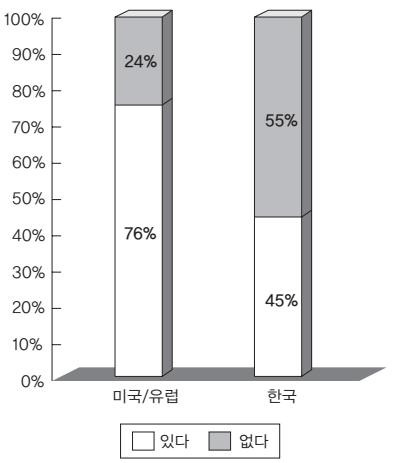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경우 그러한 양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의 교육목표에 시민성에 대한 장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수/교직원의 비율은 한국이 더 높지만(그림 6 참조), 명확하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교육과정이나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들의 반수 이상이 없다고 응답했다(그림 7, 8 참조).



〔그림 6〕 대학의 목표로 포함된 시민성 장려(교수)



〔그림 7〕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교육과정(학생)



〔그림 8〕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과정(학생)

(2) 지역사회 기반 시민교육

시민교육을 위해 대학이 채택하는 방법을 살펴볼 때, 대학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은 교과목을 통한 지식습득에 역점을 두고, 유럽의 대학에서는 학외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 대학은 이 둘을 모두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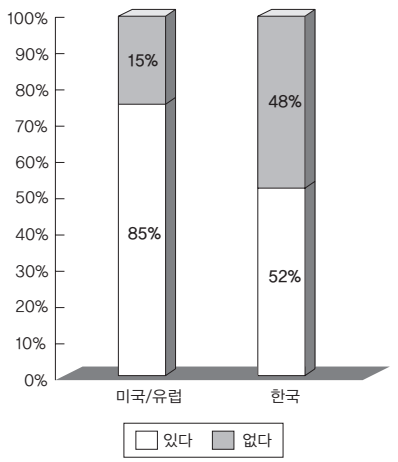
학외 경험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유럽의 대학이 제공하는 기회가 우리나라 대학이 제공하는 기회에 비해 다양하다. 특히 유럽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간접적인 학습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외 경험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미국도 인턴쉽, 현장 학습 등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을 장려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학외 활동 자체가 적고, 이러한 활동도 대부분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제한된 기회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주는 교과목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반 수 가까이가 이런 교과목이 없다고 응답했다(그림 9 참조).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났는데, 미국 · 유럽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교수/교직원의 대다수(94%)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와 수업을 연계하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비율(71%)이 더 낮았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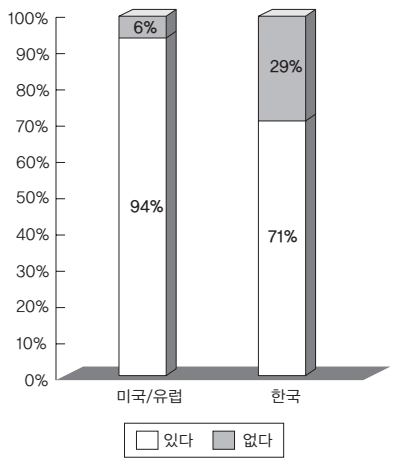
3. 지역사회 참여

대학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대학이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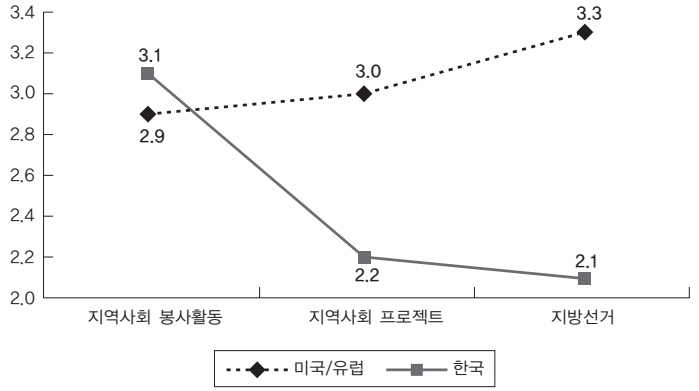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생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그림 9〕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교과목(학생)



〔그림 10〕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교과목(교수)



〔그림 11〕 대학이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장려하는 정도*

* 1~4점,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이다.(1=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약간 그렇다, 4=그렇다)

프로젝트 참여, 지방선거 참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1990년대 들어 사회봉사과목 개설이 본격화되면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은 보편적인 대학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한국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방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봉사활동 분야도 사회복지나 환경 등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봉사활동 분야의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대학이 지역 검찰청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참여

미국과 유럽의 대학의 경우 대학과 지역사회가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 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주민들이 보조를 맞추기도 하지만,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3) 지방선거 참여

선거 참여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학이 나서서 지방선거 참여를 권고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 참여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들의 과도한 정치지향에 의해 고통을 겪어 온 한국의 대학으로서는 당연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율의 하락과 정치적 무관심의 팽배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

"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사회적 책무임을 받아들이는 대학교육자들의 인식변화이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시민성의 함양을 대학교육 효과 평가의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 대학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

려해 볼 때,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참여를 위한 교육은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대학의 특성은, 지역사회 참여의 세 가지 영역을 장려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서도 잘 나타난다(그림 11 참조). 한국 대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격려하는 데에서는 미국과 유럽 대학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지방선거 참여를 격려하는 데에서는 미국/유럽 대학보다 현저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Ⅳ. 한국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그 발전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민주적 제도, 시민교육, 지역사회 참여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미국/유럽의 대학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발견된 우리나라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취약한 제도와 지식 위주의 시민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에 편중된 지역사회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우리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첫째, 대학의 제반 제도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민주적 제도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토양이 된다. 민주적인 제도가 갖추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시민교육의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방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들이 앞을 다투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교과목의 이름만 바꾸거나, '교수가 말하고, 학생은 듣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을 통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상호존중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경험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교육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대학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공학습과 시민교육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교육 관련과목의 대부분이 교

양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저학년 때 한 번 스쳐가는 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교과 속에서 지역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려는 시도를 참고로 하여, 시민교육의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분야는 학내 생활교육이다. 특히 기숙사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시민성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몇 대학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숙사를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숙사를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은 생활학습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봉사활동을 명실상부한 '봉사학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경험이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많은 대학들이 교육과정 속에 봉사활동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체제가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봉사활동을 학점화하거나 졸업필수요건으로 삼는 대학에서도,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봉사활동 후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시민의 책무에 대한 이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전 · 사후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인적인 봉사활동에 치우쳐 있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다각화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봉사활동 자체도 소중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경험 또한 시민성 함양의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경험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에 학부생들을 참가시키거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Ⅴ. 맺는 말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사회적 책무임을 받아들이는 대학 교육자들의 인식 변화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시민성의 함양을 대학교육 효과 평가의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 대학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용린(2003). *Universities, Schools and Communities : Partners for Effective Education, Community Building and Democracy*.(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Penn's Center for Community Partnerships, 주제발표). University of Pennsylvania.

문용린(2003). A case of school reform for civic education in korea.(The 2nd international forum on citizenship education in asian countries. 기조강연). Hiroshima University.

문용린(2002).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제비교 기초연구". 인적자원 정책개발연구

2002-6. 교육인적자원부.

문용린(2001). "대학에서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원광대학교 국제 세미나 자료집.

문용린(1999).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대학인성교육 연구팀(편).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pp. 1~16.

Boss, J. A.(1994). The Effect of Community Service Work on the Moral Development of College Ethics Stud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 pp. 183~198.

Dewey, J. 저, 이홍우 역(198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Ehrlich, T.(ed). Civic Responsibility and Higher Education.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series on higher education*. Arizona : Oryx Press.

Gorman, M., Duffy, J. & Heffernan, M.(1994). Service Experience and the Moral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Religious Education*, 89. pp.422~431.

Guarasci, R(2001). Developing the Democratic Arts. *About Campus*.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igher Education, Civic Responsibility and Democracy(2000). Guidelines and Research Protocols for Collaborating Researchers in Pilot Study. *Universities As Sites of Citizenship and Civic Responsibility Project*.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igher Education, Civic Responsibility and Democracy Homepage(2003). http://iche.sas.upenn.edu/

Nie, N. H., Junn, J. & Stehlik-Barry, K.(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ocqueville, A. 저, 임효선 · 박지동 역(1997). 『미국의 민주주의 Ⅰ, Ⅱ』. 서울: 한길사.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학 ·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 연구실장, 서울대 교육학과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도덕과 교육론』, 『한국 도덕교육의 위상』, 『나는 어떤 부모인가』, 『신세대 부모여, 확신을 가져라』 외 다수가 있다.